

【서평】

한국의 ‘만주학’과 지식생산양식

－박선영, 2018, 『글로벌 만주』, 한울아카데미－

김 인 수*

‘만주학’의 지평

박선영 교수의 『글로벌만주』는 국내 학계에서 생산된 만주에 관한 통상의 연구서들과는 달리, 만주 그 자체 또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해석이나 분석을 담은 글이 아니다. 또, 저자가 제시하는 글로벌(Global)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관해 국제적 차원(Global level)과 지역적 차원(Local level)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선언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만주에 관련된 지식체계의 문체에 단도직입(單刀直入)하고 있으며, 국제적, 지역적 차원이 하나로 포개어진 채 딱 달라붙어 이른바 ‘아시아의 발칸’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당겨와 현재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듯 보인다. 바야흐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일대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거대한 역사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의 동북지역 역시 마치 한반도와의 오랜 운명적 관계에서 그러했듯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보이는 이 순간에, 아니 바로 이 ‘순간’을 말이다. 구태여 지면이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없어도 무방했을, 갑작스레 시간을 건너뛰어 1930년대와 현재를 묶어버리는 대담한 시도를 편 “제6장 만주의 과거와 현재”는, 따라서 역사적 시간의 이음매를 통해 만주가 글로컬로서 부각된 두 시간국면을 응시, 비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선영 교수의 이 책은 1929년과 1931년에 열렸던 IPR(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제3차, 제4차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와 토론, 그리고 국제연맹 조사단의 『리튼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는 1928년 중국의 동북군벌 장쥘린의 폭사, 그의 아들 장쉐량의 동북역치, 1931년의 만주사변, 그리고 이에 이은 만주국의 탄생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풍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저자의 작업은 군사적 옵션이 정치를 좌우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학술의 존재형태와 그 가능성을 탐문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부록>을 포함하여 책의 각 지면마다 빼곡하게, 부분적으로는 내용의 반복까지도 감수해가면서 당시의 IPR 회의자료, 조사연구자료, 펀딩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배치해간 것에서, 정치의 시대로만 기억되는 당시의 한켠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학문의 역할을 발굴해내려는 저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정치공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당시 학문의 장 안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고유성, 독립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부각해내면서 저자는 “학문과 정치의 경계”라는 묵직한 논의를 꺼내든다. 종장에 불쑥 튀어나온 정치와 학문의 긴장에 관한 막스 베버의 논의는 그래서 별다른 위화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정치의 반영이자 그 규제요인이기도 한 학문의 고유한 의미를 부각하는 데에 헌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PR의 활동, 그러니까 국제적 차원에서 리버럴 지식인들이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교류해간 활동의 ‘임계치’를 측정하는 것이 저자 스스로 자임한 임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이미 그 이전에 만철로 대표되는 각급 기관들의 조사활동이 빈번히 존재했음도 이를 지면에서 배제

한 데에는 '진정한 의미의 학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도 일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에 관해 회자되기 쉬운 몇몇 협소한 비판, 예를 들어 만주문제는 이미 19세기부터 주요의제로 이슈화되어왔고 저자가 다룬 그 '정치계절'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이미 그 이전에 배태되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조사연구들 역시 훨씬 그 이전부터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저자를 대신하여 알리바이를 마련해둔 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이 책에서 저자는 학문의 차원에서 소위 '만주학'의 존재와 그 현재적 함의를 묻고 있으며, 저자의 이러한 노고 역시 그 자체로 '한국 만주학'의 수준과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마치 IPR에 관한 두툼한 자료집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처지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비중이 현격히 떨어졌던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간 국내에 소개된 IPR 연구는 구미 학계나 일본에 비해 소략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종의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하는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당시에 나온 담론에 대한 섭렵, 분석, 평가는 물론, 이에 관해 최근까지 진행된 일차연구들을 각 입장별로 입체적으로 잘 그려내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지닌 큰 미덕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에서 제출된 IPR연구로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 책이 '한국 만주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의 생각 역시 바로 그 점에 의거한다

학문과 정치의 경계?

그러나 <참고문헌>을 보면서 문득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된다. 영문, 일문, 중문으로 된 서지가 빼곡이 정리된 가운데 한글로 된 문헌의 수는 현저히 적고, 게다가 한글로 된 일차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물

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1920~30년대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보유한 학문적 역량이라는 것이 정치구조의 비대칭성에 의해 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근원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당시 조선인은 IPR 회의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행위자로서 나설 수 있었다기보다는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야유하는 관객의 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였던 셈이다. 입장을 가진 세력들의 경기를 멀리 서서 관조, 관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종종 사물에 대한 치밀한 인식을 방해하고 제약하기도 하는데, 이 책이 보여주는 레퍼런스의 외부성은 그 양상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음을 웅변하는 듯하다. 이걸 저자의 한계이기보다는 시대의 한계이고 우리 사회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를 구태여 저자의 탓으로 문제삼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스타디움 위의 관객이 갖는 시각의 독특성이라는 문제를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관객은 선수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는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이겼는지를 단박에 포착할 수 있다. 열강의 이해관계 격돌은 관객=주변의 시선에서 비교적 공평무사하게 읽힌다. 저자가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열강들의 각 소속을 가진 IPR지부의 움직임을 그들 하나하나의 입장, 이해관계를 토대로 해석해낸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이차연구들이 여전히 각 국가단위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적시한 점은, 저자가 전체 경기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고급관객’임을 시사한다. 이 자리, 그러니까 전망이 가능한 망루에 올라서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철저히 ‘지식의 계단’을 쌓아올려 왔는지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관객은 거기까지이다.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선수는 선수다. 선수는 감독과 전략, 전술을 짜고 그라운드에 올라와 심판이 상징하는 룰을 의식해가면서 경기를 진행해간다. 선수에게 전략, 전술은 실감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승패가 정해지면 무대 뒤로 물러서 그 원인을 곱씹으며 다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관객과 달리, 선수는 전략=지식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며 다시 재점검하여 새로운 전략=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른바 '전략=지식의 생산자'이다. 그는 실제로 해본 사람이고 몸으로 해본 사람이다.

학문과 정치의 경계는 관객에게는 규범적이지만, 선수에게는 실천적이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공간에서 책임윤리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만 신념윤리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또, 『사회과학의 객관성』 논문에서 사회·과학 안에 (이미) 배태된 '가치관심'의 의미를 음미했다. 그렇다면, IPR의 사회과학, 그 객관성, 그 학문됨의 성격이란 무엇이고, 현재의 우리는 이를 어떻게 분석, 평가해야 할 것인가? 토론장에서 벌어진, 사회·과학의 이름으로 충만했으되 마치 '국가대표들'의 발언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객관성들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보다 본질적으로 IPR이 이해관계의 절충과 타협을 위해 제안한 그 사회과학적 조사는 지식권력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저자가 서두에서 윌러스틴의 연구를 가져와 잘 밝히고 있는 것처럼, IPR은 냉전기 미국의 지역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페어뱅크와 래티모어로 대표되는, 장래 '아시아 지역전문가'로 이름을 떨칠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IPR에서 학문이력을 시작하고 있다. 각국 주권의 문제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일본과 조선을 제외하고, 1920~30년대 중국에 관한 수준 높은 학술적 조사는 IPR을 매개로 가능했고 그 결과물들은 지금까지도 고전, 정전으로 남아 있다. 저자는 이들 조사자료에 기초한 학술적 토론이 당시 IPR의 기여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문과 정치가 연결/유착되었던 지점에 관해 저자는,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의 IPR지부가 자신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했고 참가자의 선별도 감수했어야 했다는 점, 참가자 리스트 관리도 존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계로 꼽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저자는 IPR의 '조사를 토대로 한 토론'이야말로, 비록 한두 가지의 소소한 흠결은 있을 테지만, 당시의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정치를 규제할 수 있는 학문의 힘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펴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그렇까?

저자가 제시한 <IPR 연구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로는 만주 지역 그 자체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 중국의 인구, 토지이용, 산업화에 관한 것들이나 일본의 산업화, 가족제도, 이민, (만주)정책에 관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만주의 가치가 지정학적 요인과 주변권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의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런데 이 <IPR 연구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기금을 출연한 기구는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이었다. 록펠러재단과 IPR의 의제 사이에는 혹시 모종의 관계성은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1930년대 초에 IPR의 기획으로 중국, 일본, 조선에서 실시된 조사가 있었다. 일명 토지이용조사(Land Utilization Survey)로서 중국은 로싱 벅(John Lossing Buck), 일본은 나스 시로시(那須皓), 조선은 이훈구가 각각 프로젝트를 맡아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의 조사는 설문지(Schedule)를 공유했다. 이 토지이용조사는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농업조사, 행정조사가 주로 소작이 낡는 구조적인 문제나 경작규모의 측정에 몰입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농업경영(Farm Management)의 실태를 확인하고 농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측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띠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60년대 초에 IPR이 매카시즘 등 여러 정치스캔들에 의해 역사속으로 사라져간 이후에도 이 조사의 개념은 살아남아 지속되었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토지이용조사를 담당했던 로싱 벅은 1953년에 The Council on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CECA)의 농업경제학 부문 디렉터로 취임하여, 아시아농업경제의 전문가로서 약 4년 동안 조직을 이끌었다. 이 CECA는 록펠러 3세가 1953년에 설립한 기관이고, 이후에 농업발전협회(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ADC)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이 ADC는 냉전기 미국의 아시아 및 제3세계 농업정책을 민간에서 실행해간 조직으로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농업학계에 학술과 재원의 제공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다소 사후적인 관점이지는 하지만, 록펠러재단의

관점에서 보면, IPR이나 CECA/ADC는 모두 한결같이 동아시아에서의 의제 생산 주도권, 다시 말해 인구조절/이민통제와 농업경영/식량증산이라는 의제의 구축을 이루어내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 내적인 차원에서 볼 때, 1920~30년대에 IPR이 주도한 사회과학 지식체계는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소농경영의 현실이나 소작, 영세경작에 관한 비판적 분석에 몰두했던(제국 일본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지식체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거칠게 말하면, '미국식 농정관'이 당시 IPR의 토지이용조사에 강력하게 투영,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농업에 관한 관념, 농정과 인구/이민에 대한 개념을 일신(一新)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학문과 정치의 경계에 관한 저자의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IPR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둔 리버럴 지식인들의 토론장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IPR이 사회과학적 연구/조사를 통해 양산해내고 있었던 인구, 이민, 농업, 식량에 관한 세계관, 다시 말해 사태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 소용된 문제화, 개념화, 범주화의 양태 그 자체가 갖는 권력성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까? 여기에서 사회과학=조사=학문은 정치에 대한 규제요인이라기보다는, 인식체계 그 자체를 규정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권력으로 우뚝 서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저자는 IPR 각 지부별 입장, 활동을 상세히 정리, 소개하는 데에 각별히 애를 썼고, 특히 토론내용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IPR이 주창한 조사연구와 사회과학의 실천을 학문이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주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정치는 담론의 가시화된 논리의 싸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지식에 묻어 있는 세계관, 인식체계의 수준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IPR의 학문적 실천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사회과학 지식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전문적 사회과학 지식이었는지를 지식체계 내부로 한걸음 더 들어가 논의를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만주』는 하나의 완결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레 제안을 해본다. 저자의 질문처럼 ‘만주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지식의 토대(레퍼런스)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감당해가면서 현실의 실감을 갖춰가는 일이 보다 소중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만주학’은 박선영 교수의 이 책을 통해 하나의 성취를,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투고일 : 2018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0월 29일